

“귀족노조는 이미 기득권… 친勞정부가 노동개혁나서야”

» 1면 ‘강성노조의 그늘’서 계속

“노조의 순기능 살리면서
임금격차 완화·실업 해소 등
책임있는 사회구성원 자세를”

이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회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또 회사측과 협상에 나서 무조건적인 강경 입장보다 사측 입장도 이해하며 ‘밀당’을 하는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만 폐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머리 떠’를 두르고 파업에 돌입한다. 회사의 부담을 키우는 셈이다.

이는 2009년 쌍용차 노조가 채권단과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쌍용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77일간 계속된 점거파업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생산차량 1만4590대, 손실액 316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진중공업은 2010년부터 경영난으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추진해 왔으며 2011년 1월에는 부산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대포공장에 대해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노조는 전면파업과 함께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을 돌입했다.

이어 파업 사태가 지난 2011년 9월 노사 합의에 의해 종결됐는데도 민주노총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이 주도하는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점거시위가 그해 11월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희망버스’라는 이름을 앞세워 총 5차례의 폭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파업의 여파는 혹독했다. 2004년만 해도 세계 5위 조선사였던 한진중공업은 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국민보다는 국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노동자보다는 경영자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그 결과 세계 최악의 근로조건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너무 커져버린 노조가 이제는 회사·노조·고객이란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됐다. 거대기업들의 노조 파워에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를 주 1회씩 심층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기간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맞물리면서 현재는 세계 30위 밖으로 밀렸다. 특히 6개월 넘게 이어진 파업으로 매일 4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500억 원에 달했다.

◆노조도 사회 구성원, 권리 주장뿐 아니라 책임도져야

일부 강성노조로 인한 피해는 국내 기업들만 입은 게 아니다. 외국 기업들 중에도 노조의 파업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손실을 입고 한국에서 철수했거나 철수를 고려 중인 업체들이 있다.

HSBC(소매부문), 골드만삭스자산운용, ING생명 등도 최근 한국에서 철수했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김스코리아도 2011년 말 한국에서 경영을 접기로 하고 매각을 결정했다. 적자가 이어지던 와중에 적자기업 김스를 인수하겠다는 국내 기업 K사가 있었으나 김스노조(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스지회)가 이 인수를 반대했다.

국민들은 강성노조를 생각하면 현대차를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데도 생산성에는 상관없이 매년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통해 임금 인상에 집착하면서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권 노조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노사관계가 국가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한다. KB금융의 경우 강성노조로 인해 향후 인건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KB금융그룹이 경쟁력을 잃는 건 순식간이다. 또한 그 비용을 이자율 조정이나 국민의 혈세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경제 성장, 물가 안정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주는 노조도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보다는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양보를 통해 임금격차 완화, 청년 실업률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지엠노조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열린 GM 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백복인 KT&G 사장 연임 반대” 기업은행, 주총서 표대결 나서

기업은행, ISS에 사외이사 지지 요청
KT&G “낙하산 인사위한 사전조치”
외국인 표심 따라 주총 승패 갈릴 듯

기업은행이 KT&G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주주 설득작업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세계적인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콘퍼런스콜 개최를 제안했다. ISS는 전 세계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견을 내는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ISS의 의견을 주로 참고한다.

기업은행은 ISS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와 콘퍼런스콜에서 백복인 KT&G 사장 연임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KT&G 주주총회에서 사장과 사외이사 선임안을 두고 KT&G와 표대결을 벌이기 위한 포석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백 사장이 분식회계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KT&G 측에 전달했다.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기업은행은 사외이사를 2명으로 확대하고, 오철호 송

실태 교수와 황덕희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주주제안을 했다. 현재 KT&G 이사회가 경영진에 편향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은 KT&G 지분을 6.9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9.09%)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KT&G가 주주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표 대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T&G는 기업은행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옮기는 동시에 사외이사 협원을 기준대로 유지하는 안과 KT&G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도 상정했다.

이번 KT&G 주총의 승패는 외국인 ‘표심’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기준 KT&G의 외국인 지분율은 53.13%다.

기업은행의 행보를 두고 시장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오다. 주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새로운 ‘관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 51.8%를 보유한 국책은행이다.

KT&G 노조는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백 사장을 반대하고 사외이사를 2명 늘리려는 것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조치”라며 “정부는 KT&G에 대한 경영개입과 낙하산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손암지 기자 sonumji301@

